

중, IP 전문 법원 설립... 특허소송 관할 집중시킨다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전문 법원을 설립으로 특허 관련 소송 관할집중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활성화 및 보호 강화 정책 기조와 더불어 중국 내 지재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재권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국제분쟁의 장으로 부각될 수 있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6월 개혁 전면강화 지도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방안'을 상정안을 통과했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사법인력 관리 및 사법

지역법원 간 판결 차이로 불만 커져 시진핑, 강력한 의지로 공식 결정

제도 정비되면 국제분쟁 찾아져 현지 진출 한국기업 대비책 시급

책임제 개선, 사법인력 직업보장 등과 함께 '사법 체제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의 각급 법원이 총 22만6753건의 지식재산 관련 사건

을 수리해 20만8653건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각 지역 인민법원 간 판결에 차이가 나고 전문성 편차가 커 판결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우 쉬에펑(吳學峰) 중국 베이징산유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시진핑 주석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공식 결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전문법원 설립으로 지식재산 분쟁 사건 관할 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결 표준 불일치와 자국기업 보호주의, 지방행정체제의 사법권 간섭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 관할 집중이 중국 내 지재권 보호의 애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이라 설명했다.

설립 예정지로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둥성은 중국 내 국제특허(PCT)의 절반 이상이 출원된 지역으로 지재권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손꼽히며 장쑤성은 발명특허에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심 도시에 전문 법원을 설립해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통합적으로 집중 심사해 판결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서동욱 중국 특허관은 "아직까지 확실 시된 것은 없지만 각 지역의 언론 매체들이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전을 벌이는 중"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이 중국

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정비가 중국을 국제 지재권 분쟁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만들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저렴해 글로벌 기업이나 특허전문기업(NPE)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수 고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은 우리기업이 지재권을 활용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데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도 정비로 보다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만큼 중국 지재권 정책 변화에 대해 충분히 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한국형 IP금융 생태계' 나아갈 방향을 묻다

'국제 콘퍼런스' 서울서 24일 개최 美·英·中 전문가 참여해 노하우 전수 국내 IP금융 현황·정책 진단 이어져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의 핵심요소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재산을 금융과 접목한 IP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 위주의 발전과 제대로 된 가치 평가모델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시장에선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IP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이달 말 서울에서 예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4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중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IP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IP금융 생태계

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진단하는 'IP금융 국제 콘퍼런스'를 서울 인페리얼 팰리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에드워드 정 인텔렉추얼벤처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켈빈 킵 영국 벨루에이컨설팅 이사, 레이 사오원 중국 특허관리부 부사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에드워드 정 CTO는 'IP금융의 중심, 미국 민간투자 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세계 최대의 특허 전문기업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IP금융과 특허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투자 시장에서 IP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촉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켈빈 킵 이사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 '뱅크 인 IP(Banking on IP)'의 저자다.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가치평가 분야 영국 전문가가 증권 목록에 등록돼 있으며 뱅크 인 IP는 현재

영국 IP금융 정책의 지점과 같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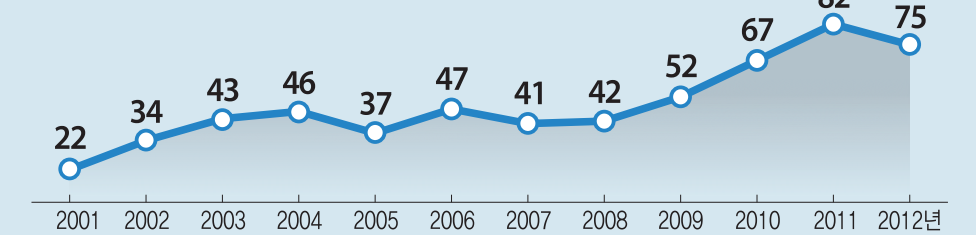
레이 사오원 중국 특허관리부 부사장은 '중국 정부의 IP금융서비스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 특허출원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 금융 시장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허권 담보 대출을 대폭 확대했다. 레이 부사장은 이 같은 중국 IP금융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 소개한다.

해외 연사들의 발표와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내 IP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와 국내 IP평가, IP기반 금융, IP법·제도·관행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창조경제의 꽃'으로 불리는 IP금융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미리 보는 미래 특허전쟁 특허소송 리스크 높은 3D프린터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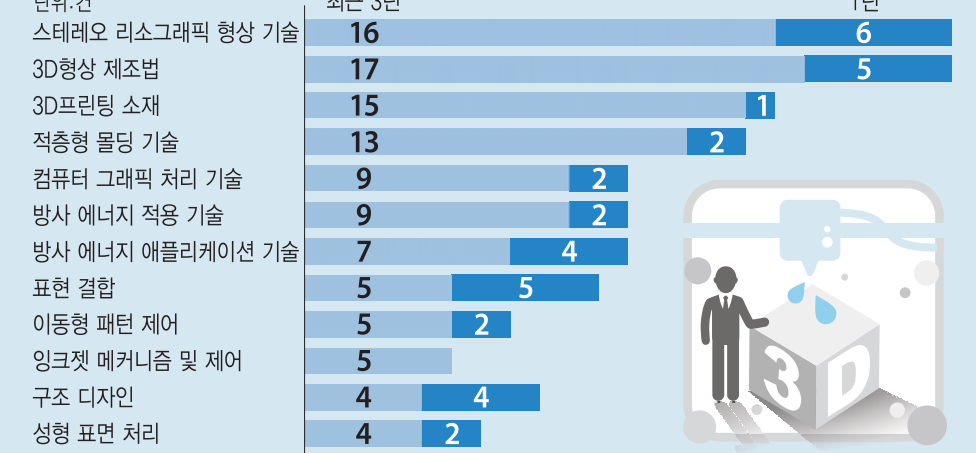
연도별 3D프린터 관련 특허 출원 동향 단위:건



3D프린터 특허 기술별 소송 수 단위:건

기술명	2003년	2005년	2008년	2012년	2013년	합계
3D형상 제조법		4			9	13
적층형 몰딩 기술					9	9
스테레오 리소그래픽 형상 기술		4			4	8
방사 에너지 적용 기술		2	2			4
수장식 혹은 밀폐형 타입 기술					4	4
방사 에너지 애플리케이션 기술			1	1		2
3D프린터 센서 제어 기술		2				2
잉크젯 메카니즘 및 제어	2					2
몰딩 혹은 세이밍 후속 보완 기술					1	1
이동형 패턴 제어					1	1
관련 입자들의 결합에 의한 조형					1	1

3D프린터 특허 출원 건수 단위:건



최근 3D프린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특허 소송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3D프린터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특허소송 이슈는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1년간 3D프린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발행한 IP노믹스 보고서 '3D프린터 기회인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소송을 비롯해 분쟁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기술은 '3D형상 제조법(Specific Application, Apparatus Or Process)'과 '적층형 몰딩 기술(Mechanical Shaping Or Molding To Form Or Reform Shaped Article)'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스테레오 리소그래픽 형상 기술(Stereolithographic Shaping From Liquid Precursor)'도 최근 특허소송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3D형상 제조법'은 최근 10년간 13건의 소송이 발생했으며 그 중 9건이 최근 1년 내에 발생했다. '적층형 몰딩 기술'은 2012년까지 소송은 없었으나 2013년에 9건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3D형상 제조법' '적층형 몰딩 기술' '스테레오 리소그래픽 형상 기술' 등은 최근 특허출원 수도 많아 3D프린터 업계의 연구개발(R&D)이 집중되고 있는 핵심 영역으로 분석됐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3D프린터 특허리스크 급등 기술은 소송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분야로 소송은 기업 활동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성숙 여부와 무관하게 큰 이슈로 부각된다"며 "3D프린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핵심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etrc@etnews.com

천문학적 특허소송 비용 줄이기 나선 美 사법부

기고-김성훈 미국 특허변호사



(Octna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LLC)과 헬스케어 시스템 기관인 하이마크와 올케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분쟁 사건(Highmark Inc. v. Allcare Health Management System Inc.)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무분별한 특허소송 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허괴물들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는 특허소송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제기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다. 많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특허법 285조는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승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승소자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해당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입증할 때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예외적인 사건을 인정하는데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 비율은 무척 낮다. 따라서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에 승소하고도 예외적인 사건 입증에 실패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4월 29일, 미 연방대법원은 특허법 285조에 대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운동기기 제조업체인 옥탄 피트니스사와 아이콘 헬스앤피트니스사가 맞붙은 사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기존의 예외적 사건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승소자는 변호사 비용 보상을 위해 해당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판사가 '상황의 총체성(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방지방법원이 판결한 제1심의 내용을 연방합소법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 심리했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제1심의 재판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방대법원이 예외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특허소송 승소자가 특허괴물에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skim@whda.com

국 특허괴물이 소송 제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게 돼 무분별한 특허소송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랜들 레이더미 연방합소법원 법원장도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재미특허변호사협회(KAIPBA)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최근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판결로 특허괴물로 인한 소송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법원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 반환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사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합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소송 승소자가 결정된 후에야 요청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반환 부분은 소송비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관련한 특허법 개정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 법안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가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비용의 감소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개정 법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생각을 같이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소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분별한 특허소송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미 사법부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괴물로 인한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 대전시·강원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허브 구축' 공동 수행기관 선정

특허청이 대전시, 강원도와 손잡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특허청은 대전시와 강원도를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사업' 공동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미취업자, 기업 CEO 및 실무인력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다양화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과 지자체는 지역 산업 특색을 반영한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하고,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대전지역에 소재한 특허청, 특허법원과 다음달 이전 예정인 한국특허정보원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학으로 대전대, 충남대, 한림대를 선정했다.

강원도는 전략산업인 춘천권 바이오산업, 원주권 의료기기산업, 강릉권 신소재·해양생물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을 지식기반 산업과 연계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대학에 원주대, 한라대, 한림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심화 강좌를 15

학점 이상 개설한다.

또 해당 지역 기업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 중심 교육 및 채용을 위해 협력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이론 교육 이수 학생이 현장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채용 연계 캠프 및 지역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배출되도록 대학교과 과정 개편에 직접 참여하고, 실무형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멘토로 참여하거나 현장 실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강좌는 올해 여름학기부터 개설될 예정이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지식재산네트워크 정책 콘서트' 서울서 20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윤종용)는 국가 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정책 콘서트를 20일 서울 노보텔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KIPnet은 지식재산(IP) R&D, 보호, 금융, 인력, 교육,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100여개 기관 및 단체에서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범국가적 IP 정책협의체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KIPnet 출범 후 첫 워크숍으로 5개 분과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분과별 이

슈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상의 녹색생각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특강을 진행하고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고충근 인텔렉추얼스톤 대표 등이 각 분과 경쟁 스피치에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KIPnet 위원으로 활동 중인 회원은 물론이고 향후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도 참석이 가능하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3D프린터 기술 동향 및 글로벌 기업별 IP경쟁력을 분석한 IP노믹스 보고서 '3D프린터, 기회인가?'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